

영리병원 존치·폐지 논란 재점화

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반영... 내년 발의 예정
 “영리병원 미비점 보완... 진료대상 외국인으로 한정”
 위성곤 국회의원은 특례 폐지 개정안 발의 귀추 주목

영리병원 전면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병원 존치를 전제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영리병원 존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관계자는 “외국인 설립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을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307조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한해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되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해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을 통한 법 개정 방식은 정부 발의 형태를 말한다. 제주도는 해마다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지원위는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된 과제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발의된다.

정부 발의 방식은 의원 발의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지만, 이미 전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영리병원 특례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터라 제주도로서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제주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영리병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 각 부처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에 도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총리실 산하 지원위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다. 현재 도의회 재적의원 43명 가운데 과반

이 넘는 29명이 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의회 등의 절차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제주도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 법안 발의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어렵게 인정 받은 영리병원 특례를 살리면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 우리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구 의원 입법 발의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방법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대한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돌고래 위협받는 순간 8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 바다에서 돌고래탐방선과 제주남방큰돌고래(점선)가 부딪힐뻔한 아찔한 상황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강희만기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8~10일 제주 홍보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8~10일 사흘간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빛과 바람으로 Green, 스마트시티 제주'를 주제로 제주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며, 각국 도시와 기업 전문가들이 미래도시 비전을 공유하는 국제적 행사다.

제주도는 스마트시티 헬렌지 사업을 주 테마로 GS칼텍스와 스마트시티 플랫폼 전문기업 시티랩스를 비롯한 15개 컨소시엄 기업 등과 함께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한 퍼스널 모빌리티(PM) 운영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공유·거래 모델을 제시한다.

전시관에서는 스마트허브를 주요 콘셉트로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와 공유 모빌리티를 소개한다.

강다혜기자

잠잠하던 코로나 집단감염 '꿈틀'

8일 오후 5시 기준 21명 확진... 대정초 15명
 백신 1차접종 40만5095명 완료 목표 초과 달성

제주지역에서 하루새 21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타나며 최근 확산 감소세를 보이던 추세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5시까지 21명(2672-2692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에선 지난달 27일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0명 대를 이어가다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 한자릿수 확진이 이어졌다. 이날 12일 만에 20명대 확진자가 나타난 것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6명,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 타지역 입도객 3명 등이다.

특히 이날 집단 전파 사례가 새롭게

발생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대정초등학교 학생이 최초 감염된 이후 이날 학생 9명을 비롯해, 확진자의 부모 또는 자인 4명이 감염되면서 대정초등학교 관련 총 15명이 감염됐다.

대정초 감염 사례는 현재 집단감염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질병관리청과 협의 후 집단감염으로 명명할 예정이라고 제주도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5시까지 대정초와 관련 학생 290명, 교직원(방과 후 교사 포함) 53명 등 총 34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9명이 확진 판정 받았으며 나머지 334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주지역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에선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목표인 40만2580명을 넘어선 40만5095명이 접종을 완료해 목표 대비 100%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2월 26일 이후 195일만이다.

이날 기준 1차 백신 접종자 수는 40만5095명이며, 완료자는 24만431명이다. 제주도 전체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60.0%, 완료율은 35.6%로 집계됐다.

접종 목표인 접종 대상 인구수(57만 5116명) 70%(40만 2580명)와 비교하면 1차 접종률은 100.6%, 완료율은 59.7%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692
 8월 17시 기준

올해 노지감귤 49만7000t 내외 전망

전년보다 3.5% 가량 감소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49만7000t 내외로 예측됐다. 이번 노지감귤 생산 예측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사흘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예측치와 비슷했다.

도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8일 올해 산 노지감귤은 전년보다 1만8000t

(3.5%) 감소한 49만7000t내외(47만 9000t~51만5000t)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적으로 나무 한 그루 당 달린 평균 열매수는 842개로 전년보다 58개(6.5%) 적었으며, 최근 5년 평균(858개)과 비교해서도 16개(2%) 적었다.

조사위원회는 11월 최종 수확 시기엔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 올해산 품질이 전년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민기자

오늘부터 행복
똑똑한 플랜

무배당
MG 행복저축공제피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일시납 저축보험
10년(만기)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단, 관련 세법요건 부합시)
중도인출 · 추가납입으로 여유자금 운영
연금전환으로 노후생활 준비까지

가입한도

구분	공제가입금액	가입단위
주계약	5년만기	100만원 ~ 10억원
	7년만기	
	10년만기	

※ 기준에 가입한 공제가입내역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